

안녕하십니까, 윤채민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민기 부의장께서 올린 소박한 고민과 다짐 잘 읽었습니다. 신민기 부의장께서는 최근 올라간 불신임안 과정에 대한 의구심에 대해 5가지 이유를 들어 불만을 표시하신 바 있으며, 저는 그에 대해 하나씩 오류를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불신임안 동의 서명 인원 에 관한 부분입니다. 신민기 부의장님께서서는 저희가 규정인 40인 동의를 지키지 않고 30인으로 의장단 불신임 발의한 것에 잘못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이에 발의자측은 지나친 억측과 과장된 표현을 자제해 주시길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운영위원회의에서 투표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대한 사건의 전말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인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올해 9대 때 바뀐 부분입니다. 현재 대청의 규정을 확인해 보면 최종 수정 날짜는 [2015.08.01]로 8대에서 바뀐 9대 규정이 아직 수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따라서 9대 발대식 당시 배부된 책자에 기재된 [불신임안 발의 시 동의 40명]과는 다르게 대청의 홈페이지의 경우에는 [불신임안 발의 시 동의 30명]으로 구 버전이 기재되어 있었음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즉, 홈페이지 관리 또한 담당하고 있는 의장단이 이를 제대로 수정하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였습니다. 의장단 측에서도 운영위원회의에서 한 위원장이 이 부분을 지적하기 전까지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불신임안 측에만 잘못을 따지는 것은 책임 회피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의장단이 전에 몰랐다는 것은 규정에 대해 자세히 보지도 않았으며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또다른 이유가 됩니다.

또한 본 불신임안 서류는 사무국 측을 거쳐 운영위원회의 사안으로까지 넘어간 바 있습니다. 의장단과 위원장들이 함께하는 운영위원회의에서 이 문제는 회의와 투표를 통해 이의제기 없이 30인으로 진행하는 것에 통과되었고, 이번의 사례는 예외로 두어 발의할 수 있도록 결정된 것입니다. 이 회의가 의장단도 있는 자리였다는 점에서 그 회의가 끝나고 불신임안도 상정된 지금 이걸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위원장들이 이에 대해 회의했으며 공정하게 사무국 측이 회의를 진행했고, 의장단과 불신임안 대표 발의자가 참관한 상태의 회의였으므로 30인으로 진행한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불신임안 동의자의 운영위원회의 회의 참여 부분입니다. 신민기 부의장께서는 불신임안 동의자가 운영위원회의에 참관했다는 것이 중립 의무에 어긋난다며 갈등 조장과 정치질에 앞장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선 대표 발의자가 운영위원회의에 참관한 것은 운영위원회의 내부의 투표를 통한 동의 사항으로 참관하였던 것이고, 불신임안 당사자인 의장단도 운영위원회의를 참관했는데 불신임안 발의 측에서도 동일하게 1명은 참관을 해야 공정하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 행한 일입니다.

또한 불신임안 동의자 중 한 명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한 점에 있어서 평가르기와 정치질에 앞장섰다는 것이라고 하셨으나, 위원장 또한 위원장이기 이전에 단체의 의원입니다. 단체의 잘못된 사항에 있어서 이를 제지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위원장님이 자신의 위원회에 가서 위원회 의원께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 하거나 위원회 분위기를 유도하지 않으셨기에 평가르거나 정치질을 전혀 없었습니다. 그 동의자는 대표 발의자도 아니었을뿐더러 자신의 신념에 따라 동의하였고, 의견 표출도 사무국이 제사한 안건에 대한 의견 표출이었습니다. 덧붙여, 각 위원장들은 위원회의 의견을 대표함과 동시에 의장단과 신뢰 관계를 통해 대청의를 이끌고 있습니다. 허나 위원장이 제시하는 의견을 편파적이라거나 의도적이었다며 비판하시는 부의장님의 태도는 옳지 않습니다. 위원장과의 신뢰 관계를 형성치 못 하고 오히려 그들의 의견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편파적이었다고 언급하시는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중 불신임안에 대한 논의에서 [불신임안에 동의하신 XX 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의견 제시를 제한 받은 것]이라고 직접 언급하신 것을 보아 운영위원회는 이런 위원장의 의견 제시에 제한을 하며 더욱 엄격하게 진행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내용이 유사한 관계로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안 통과를 위해 의사결정정족수를 개정하려는 꾀수를 썼다고 하셨는데, 다음과 같은 의혹에 있어 본 발의자측은 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본래 규정 상 불신임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통과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정기총회는 전체 의원 중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는 것만으로도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기 위한 절차를 논의한 것입니다. 이론과 실재가 다른 것처럼, 실제로 불가한 상황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항이 무산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느끼고 이 문제를 운영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 회의를 한 바 있습니다. 의장단도 있었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결과이고 그 결과에 따라 총회 참석 인원이 재적의원 수의 과반수를 넘을 경우 이를 표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래 불신임안의 상정에 관한 것은 의원의 '자유발언'의 권리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결과를 즉시 표결하기로 하거나 후에 하기로 하거나의 문제는 운영위원회를 통해 통과된 사항임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이는 불신임안 측에서 주장한 표결 절차가 아닌 사무국과 의장단,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있어 의의가 있었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정정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공식적이지 않은 자리에서 이후 불만을 표출하는 부의장님의 모습을 옳다고 보기에 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신임안이 이미 부결된 안건이라고 하셨는데 이번 의장단의 불신임안

은 부결된 적 없고 오히려 아직 투표에 부치지도 않았습니다. 총회에서 각자의 입장 발표와 질의응답을 통한 불신임안 논의만을 진행한 것이며, 그 자리에서 부족한 인원으로 투표를 하게 되면 과반수가 넘는 부득이하게 총회에 불참한 의원들께서는 정확한 내용도 모르고 투표도 참여하지 않은 채 결과만 통보받게 되는 상황이므로 총회 시작 직전 의장단과 위원장, 사무국이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불신임안 투표만 온라인으로 하기로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총회도 끝난지 며칠이 지난 지금 와서 이러한 언급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표결을 온라인으로 하는 것은 신민기 부의장께서 앞서 말씀하신 [재적의원 수 과반수의 동의]라는 항목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6월 총회를 통해 참석한 의원님들만을 대상으로 표결을 진행한다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준을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투표 권리를 제한하는 일일 것입니다. 따라서 불신임안 측을 비롯한 운영위원회의 일원들은 이에 대해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여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묻고자 한 것이지 규정을 지키지 않기 위함이 아닙니다. 또한 이러한 온라인 투표에 관한 발언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진행된 것임으로 불신임안 측의 독단적인 결정이 아님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불신임안이 올라갔다는 것은 의장단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의장단이 잘못 처신한 내용이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건 오해라는 해명이나 잘못 인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신민기 부의장께서는 불신임안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만일 스스로가 떳떳하고 진실하다면 의장단 측 입장문을 제대로 보내고 불신임안이 부결될 결과를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불신임안 과정에 대해 트집을 잡으시는 것은 불신임안이 가결될 것에 대한 불안함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신임안 과정에는 잘못이 없으며, 운영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각자의 입장문을 전달하였고 발표 영상도 곧 올라가 투표가 시작될 것이니 부의장님께서도 따라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신민기 부의장께서 쓰신 글에서 불신임안을 애초에 쓴 목적을 의심해 봐야 한다고 계속 언급하신 바 있는데, 그렇다면 불신임안에 쓰여 있는 잘못은 인정하고 반성하십니까? 스스로의 잘못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러한 글을 쓰셨다는 것에 이해가 되지 않고, 불신임안에 적힌 불신임 근거는 목적이 어떻든 사라지지 않는 것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속이는 태도는커녕 과정에 대해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고 계신 것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사무국에만 책임을 묻는 행동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그런 부분을 알고 계셨다면 그 홈페이지의 단체의 대표이신 의장단 측에서 이를 지적하여 수정하도록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오류 또한 부의장님께서 이번 불신임안에 대한 트집을 위해 홈페이지를 보다가 이번에 발견하신 사항이 아닐지 궁금합니다. 심지어 현재 홈페이지 대문 '의장단과의 대화'의 사진은 8대 의장님의 사진이 걸려있습니다. 이는 그곳을 이용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것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는 것이 당연하며, 단체를 위해 의견을 표명한 불신임안에 대해 목적이 불순하다고 의심하고 불복하는 부의장님의 모습이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애초에 저희의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저희가 불신임안을 작성한 이유는 대청의 파벌 조장이나 개인적 감정 때문이 아님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